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위협은 친구를 가깝게 하는가?

-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변화 요인 분석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외교학 전공

홍 예 림

위협은 친구를 가깝게 하는가?

-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변화 요인 분석 -

지도교수 조 동 준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외교학전공
홍 예 림

홍예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전 재 성

부위원장 정 성 철

위 원 조 동 준

초 록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피후견국 한국은 후견국 미국의 동맹정책이 변화하는 시점마다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존 문헌들은 후견국이 어떠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피후견국의 인식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신뢰는 후견국의 행동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을 인식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변화 요인을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한국 내 개인 특성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며, 이행 방식에 따라서는 매몰비용 정책, 다자 청중비용 정책, 양자 청중비용 정책 순으로 신뢰를 보였다. 둘째, 잠재적 적대국 위협 수준이 달라질 때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대국 위협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 혹은 매개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피후견국 개인의 기질 중 정치이념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는 관찰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간 억제 효과의 강도 및 여부를 살펴본 기존 문헌과 달리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차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효과를 추정하게 한다. 또한 확장억제의 관점에서 적대국의 위협 및 후견국과의 반복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때 피후견국 내 개인 인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새롭게 형성 혹은 변화되는지 확인하게 한다.

주요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후견국 신호, 잠재적 적대국 위협, 개인 특성, 설문 실험

학번: 2020-27965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논문 구성	4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5
제 1 절 국가 차원 변수	6
1) 후견국 신호	6
2) 잠재적 적대국 위협	9
제 2 절 개인 차원 변수	11
1) 피후견국 내 개인 인식	12
2) 기존 문헌의 한계 및 소결	14
제 3 장 연구 설계	17
제 1 절 분석 대상 (피후견국 내 개인의 신뢰)	17
1)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	19
2) 잠재적 적대국 위협	21
3)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	23
제 2 절 가설 설정	24
제 4 장 실증 분석	29
제 1 절 데이터 및 변수 설정	29
1) 분석 단위 및 데이터	29
2) 종속변수	30
3) 처치변수 및 설명변수	31

(1) 처치변수	31
(2) 설명변수	34
4) 통제변수	35
제 2 절 분석 모형	36
제 3 절 분석 결과	37
1)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따른 신뢰 변화	37
2) 잠재적 적대국 위협에 따른 신뢰 변화	40
3) 피후견국 개인 특성에 따른 신뢰 변화	43
제 4 절 소결	46
 제 5 장 결 론	48
제 1 절 연구 요약	48
제 2 절 연구의 함의	49
제 3 절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51
 참고문헌	53
부록	61
Abstract	65

표 목 차

[표 III-1]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개념적 유형화	20
[표 IV-1] 기술통계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37
[표 IV-2] 기술통계 (가설 2의 이론적 전제)	41
[표 IV-3] 적대국 위협 및 기질적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전체 OLS)	44

그림 목 차

[그림 II-1] 기존 문헌 한계 및 논문의 문제의식	16
[그림 III-1] 실험 순서도	30
[그림 IV-1]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대북정책 선호)	39
[그림 IV-2]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동맹정책 선호)	39
[그림 IV-3] 잠재적 적대국 위협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	42
[그림 IV-4] 피후견국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	39

제 1 장. 서 론

1. 문제 제기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결정을 두고 미국 안팎으로 여론이 뜨거웠다. 미국 내에서는 철군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된 반면, 주변국들은 철군 결정이 동맹에 가지는 함의에 주목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이후 동맹에 대해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리라 예상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¹⁾ 국내 보수권에서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이 한미동맹 위기론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

이처럼 후견국이 어떤 동맹 약속 이행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피후견국의 동맹 인식은 변화한다. 그러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는 후견국의 이행 수단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적대국이 피후견국을 지속적으로 위협

1) 영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미군의 철수 시한 연장 요구를 거절 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제적 허니문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며, 서구 동맹국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의미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아프간 대피 이견 못 좁힌 G7…유럽과의 깨진 관계 ‘상처에 소금’ 뿐인 바이든” (2021. 08. 25)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8251342001#c2b> (검색일: 2021. 09. 18.)

2) 한국일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 (2021. 08. 1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817170005358> (검색일: 2021. 09. 18.)

한다면 피후견국은 높아진 안보 불안으로 인해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피후견국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안보에 대한 관심 수준과 같은 기질이나 속성도 피후견국의 동맹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동맹 약속 이행(alliance commitment)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따른 피후견국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두 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첫째, 기존 문현은 동맹 약속 이행 과정에서의 ‘후견국-적대국’ 혹은 ‘후견국-피후견국’ 관계를 억제(deterrence)의 관점으로만 인식했다. 전자는 후견국이 잠재적 적대국의 공격이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강도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후자는 후견국의 관점에서 동맹 내 피후견국의 도덕적 해이 혹은 동맹 이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그러나 국가의 신호는 근본적으로 상대국 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간 상대국 행동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 혹은 변화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차원의 관찰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 차원 데이터는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가정하므로 국가 내 개인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변수를 담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을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보완 방향을 확인하고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특정 분석 수준 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이 변화할 때, 이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는 얼마나 변화하는가?

2. 적대국 위협이 높아질 때,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는 얼마나 변화하는가?
3. 개인 특성이 달라질 때,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는 얼마나 변화하는가?

다음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첫째, 피후견국 동맹 약속 이행 신뢰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 단위에 따라 정리하고 보완 방향을 확인한다.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는 안보 연구의 주된 관심이었던 억제 현상과는 다른 작동방식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다양한 분석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의 한계와 보완 방향을 정리하여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밝힌다.

둘째, 본 논문이 주목하는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개념의 이론적 맥락을 정리하고 분석 범위를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억제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집중했던 기존 안보 연구에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개념이 등장 및 부상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정리하여 전체 그림에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논문이 설정한 가설의 이론적 전제와 적용 범위를 기술하여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셋째, 후견국의 신호 유형,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피후견국 내 개인의 특성이 각각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신호와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간 단선적인 관계를 가정했던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신호에 대한 인식이 동맹국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동맹 약속 이행에 따른 피후견국의 인식 변화를 다룬 기존 문헌을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에서 현상을 살펴본 연구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는지 정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문헌이 가지는 공백을 확인하고 본 연구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을 기술한다.

3장은 연구 설계를 제시한다.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 그리고 적대국 위협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분석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분석 결과의 적용 가능 범위를 한정한다. 제 2절에서는 가설을 제기하고, 가설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제 3절에서는 데이터 및 변수 설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새로운 설문실험 데이터에 대한 정보 및 가설 검증을 위해 설정한 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4장에서 제시하는 통계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동맹 약속 이행 수단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기술통계와 텍스트분석을 활용한다. 텍스트분석의 경우,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를 추출하여 객관식 응답을 활용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완한다. 둘째, ‘잠재적 적대국 위협 정보’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변화를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에 따른 한국인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를 OLS를 통해 살펴본다. 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 한계,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국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속성은 협상 이론(bargaining theory)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요약된다.³⁾ 첫째, 상대국 결의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해 불완전한 사적 정보(incomplete private information)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결의나 행동을 오인하며, 반대로 상대국도 해당 국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약속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다. 이는 상대국이 특정 이슈나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대국에 대해 얼마나 헌신할 의지를 가졌는지를 서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군사동맹을 체결할 때 후견국은 피후견국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국은 후견국이 실제로 동맹 약속을 이행하여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두 문제가 전제된 상황에서 국가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대국에게 자국의 의사와 결의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서 ‘값비싼 신호’를 활용한다.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s, 이하 신호)란 상대국과의 정보 비대칭성 및 공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대외정책들을 일종의 ‘신호’로서 활용하는 전략이다.⁴⁾

3) 국가 간 전쟁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국제정치의 주된 논의 대상이며 각 학파에 따라 여러 분석과 주장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전쟁 발생 원인을 둘러싼 경쟁하는 여러 설명 중 제임스 피어론이 주장한 ‘전쟁에 대한 합리주의적 설명’(Rationalist Explanation for War)을 이론적 배경으로 전제한다. 본문에 서술한 바와 같이 피어론은 사적 정보 부족으로 인한 상대국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약속 이행 문제가 전쟁을 포함한 국가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임을 밝혔다. James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 379 – 414.

예를 들어, 후견국 미국은 잠재적 적대국인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피후견국인 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 주한미군 주둔, 연합 군사 훈련 등 다양한 동맹 정책을 신호로서 활용한다.

1. 국가 차원 분석

1) 후견국 신호

이처럼 신호는 신호를 전달받는 대상국이 잠재적 적대국인지 혹은 피후견국인지에 따라 각각 억제 현상(deterrence)과 안심시키기 현상(reassurance)으로 나누어진다. 제임스 피어론(James D. Fearon, 이하 피어론)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제정치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신호이론은 주로 적대국 억제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후견국의 신호가 무엇을 억제하려고 의도했는지에 따라 위기 교섭(crisis bargaining)과 전

4) 값비싼 신호이론(costly signals)은 진화생물학에서 처음 출발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동물 간 정보전달을 둘러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전달자로서 동물이 상대방에 보내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동에 주목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전한 신호이론은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 연구에도 접목되었다. 조동준, 2018, “신호이론으로 분석 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19(1), pp.125–127. 한편 게임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 토마스 셸링(Thomas C. Schelling)은 자신의 저서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을 통해 불확실성을 전제한 두 행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섭 상황을 수학적으로 이론화하였고, 이러한 이론화를 기반으로 노동 및 교육경제학을 연구한 마이클 스펜스(A. Michael Spence)는 경제학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내에서 국가 간 위기 교섭 및 전쟁 개시 결정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펜스는 대부분의 대학 정규과정이 피고용인이 되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소득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스펜스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이 무용한 지식을 배우는 데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 고용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달리 말하면, 피고용인의 대학 졸업장은 역량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고용인에게 구직자의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Michael Spence, “Job Marketing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No. 3 (1973): pp. 355–374.

쟁 개시(war initi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신호의 억제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신호의 억제 효과를 전반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⁵⁾

반면 신호의 동맹 신뢰(안심시키기)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신호의 억제 효과 연구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전통 안보 문헌의 연구 주제와 대상이 억제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 안보 문헌은 억제 논리를 기반으로 대상국과 공격국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피후견국의 안심은 억제 현상에 대한 부산물(by-product) 혹은 억제의 부차적 효과(secondary effect)로서만 인식되었다.⁶⁾

후견국-적대국 간 억제가 아닌 후견국-피후견국 관계를 다른 기존 문헌들 중에서도 후견국의 동맹 신뢰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에 대해 탐구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들은 주로 후견국이 어떻게(how) 피후견국에게 동맹 약속 이행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분석에 그치거나 혹은 피후견국

5)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신호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효과이므로 신호의 잠재적 적대국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신호는 주로 후견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으며, 신호의 억제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유용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핵보유국과의 공개적인 방위조약이 국가 간 군사 분쟁의 표적이 될 가능도를 낮춘다고 주장한 연구나 국제기구 공동 가입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환경이 고강도 분쟁 억제에 효과적임을 보인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s-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2014): pp. 919–935; 조동준, 2018, pp. 123–148; Han Dorussen, Erik A. Gartzke, and Oliver Westerwinter, "Networked International Politics: Complex Interdependence and the Diffusion of Conflict and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3, No. 3 (2016): pp. 283–291.

6) Brian Blankenship, "Promises under Pressure: Statements of Reassurance in US Allian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4, No. 4 (2020): p. 1019; Brett V. Benson, Adam Meiowitz, and Kristopher W. Ramsay, "Inducing Deterrence through Moral Hazard in Alliance Contra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2 (2014): pp. 307–35; Andrew H. Kydd and Roseanne W. McManus, "Threats and Assurances in Crisis Bargaining,"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1, No. 2 (2017): pp. 325–48.

이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신뢰/불신하여 발생하는 결과(consequence) 만을 살펴보았다.⁷⁾ 피후견국이 후견국으로부터 충분한 동맹 약속 이행을 약 속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후견국의 신호가 피후견국 자체 핵무기 개발 동기 변화에 영향을 준다거나,⁸⁾ 군사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피후견국의 공격성을 높이거나,⁹⁾ 핵 확장억제가 오히려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공격적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여 핵 미보유 국가로부터 더 많은 정책 양보를 얻어낸다고 보는 연구¹⁰⁾들이 있다. 요약하자면, 후견국-피후견국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피후견국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방기 위협 (threat of abandonment)을 효과적으로 관리 혹은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 이유로는 ‘피후견국의 동맹 신뢰’라는 현상을 이론적·조작적 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론적 정의의 경우, 피후견국의 동맹 신뢰 혹은 더 넓게는 동맹 인식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앞선 첫 번째 원인과도 연결된다. 해당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다보니 해당

7) Blakenship, 2020, p.1019.

8) 후견국의 신호가 피후견국을 안심시켜 피후견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보는 연구들은 후견국의 안보 보장 신호가 피후견국의 안보 불안을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피후견국이 자체 핵보유에 대한 동기를 가지지 않게 된다고 전제한다. 관련 문헌은 다음을 참고. Philipp C. Bleek and Eric B. Lorber. "Security Guarantees and Allie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2014): pp. 429–454;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2007): pp. 167–194; Sonali Singh and Christopher R. Way.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pp. 859–885.

9) Benson, Meiowitz, and Ramsay, 2014, pp. 307–335: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61–495.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 (1997): pp. 68–90.

10) Neil Narang and Rupal N. Mehta. "The Unforeseen Consequences of Extended Deterrence: Moral hazard in a Nuclear Client Sta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3, No. 1 (2019), pp. 218–250.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작적 정의의 경우, ‘피후견국의 동맹 신뢰 수준’을 어떻게 측정가능한 변수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존 문헌에서는 피후견국의 동맹 신뢰를 피후견국 안심시키기를 목적으로 한 미국 지도자의 안보 공약 발언 및 국가 방문 수 (the number of U.S reassurance statements and visits)¹¹⁾ 혹은 피후견국의 핵무기 추구와 같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의 대리변수들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과 얼마나 동일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비판의식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지도자의 안보 공약 발언과 동맹 신뢰 수준을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공약 발언이 반드시 피후견국에게 후견국이 의도한 바와 같이 높은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후견국의 안보 공약은 동맹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피후견국의 핵무기 추구가 동맹 신뢰 수준의 대리변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후견국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동기가 동맹 신뢰 변화에 따른 것임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맹 관계 변화에 따른 피후견국의 핵무기 추구 및 개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된 합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후견국 신호에 따른 피후견국의 동맹 인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 잠재적 적대국 위협

동맹은 두 국가가 외부 위협에 맞서 균형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공약이며,¹²⁾ 이러한 정의에 따

11) Blankenship, 2020, p.1023.

라 동맹에 대한 이론들은 동맹을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해해왔다.¹³⁾ 달리 말하자면, 기존 연구들은 외부 위협 수준 혹은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이 동맹국의 행동과 동맹 결속(alliance cohesion)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달리 기존 연구의 흐름은 적대국 위협이 동맹 관리(alliance management)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동맹 형성(alliance formation)이나 동맹 종결(alliance termin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¹⁵⁾ 이로 인해 적대국 위협이 동맹 형성 이후 반복적인 협력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후견국-피후견국 관계 동학이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적대국 위협이 피후견국의 동맹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도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주장한다. 위협이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더 신뢰하도록 만든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높은 적대국 위협이 피후견국의 안보 수요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후견국은 동맹을 평시보다 가치있게 여기고 그 밖의 선택지를 위험한 시도라고 인식하게 되어 후견국에 대해 더 높은 결속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높은 위협이라는 조건이 존재할 때 위협이 피후견국으로

-
- 12)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p.157.
- 13) Jesse C. Johnson,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3 (2017): p.736.
- 14) Victor D.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00): p.263
- 15) Brian Lai and Dan Reiter.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2 (2000): pp. 203–227; Brett Ashley Leeds and Burcu Savun.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2007): pp. 1118–1132; Jessica Edry, Jesse C. Johnson, and Brett Ashley Leeds. "Threats at Home and Abroad: Interstate War, Civil War,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3 (2021): pp. 837–857.

하여금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피후견국이 결국 동맹을 이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인한 안보 수요가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높여 대안적 수단을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위협 수준이 피후견국의 동맹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¹⁶⁾

한편 경험적 연구 내에서의 잠재적 적대국 위협은 주로 COW(Correlates of War) 데이터 내 변수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양자 차원(dyad level)에서 지난 10년 동안 서로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지난 10년 동안 양측이 경험한 분쟁의 전체 합계, 지난 10년 동안 상대국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쟁에서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동맹국과 적대국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위협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은 상대국이 해당 신호를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할 때에만 효과를 가진다. 달리 말하면, 국가 차원의 데이터는 피후견국이 위협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혹은 특정 대리변수가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높은 위협을 인식하게 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변수들은 적대국이 보내는 다양한 위협 신호 중 파편적인 부분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위협 신호 내의 세부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적대국 위협 수준이 달라질 때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개인 차원 분석

거리에 많은 경찰관이 있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누군가는 많은 수의 경찰이 필요할 만큼 동네가

16) Blankenship, 2018, pp. 64–65.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신호를 통해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자국의 높은 안보 위협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송신자(sender)가 높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보낸 신호는 관찰자의 해석에 따라 상이하게 인지되므로 신호가 언제나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¹⁷⁾

1) 피후견국 내 개인 인식

이처럼 신호의 수용 범위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나 약속 이행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수용자가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호의 효과는 신호 자체가 가지는 특성보다 신호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정보 처리는 개인의 심리적 편향(psychological biases)이나 국내적 제약(domestic constraints)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다.¹⁸⁾ 예컨대 한 국가 내 개인이 정치적 당파성으로 인해 동일한 외부 위협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여 동맹 내부의 협상 행태(bargaining behavior)가 달라질 수 있다.¹⁹⁾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국가 차원 분석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 차원에서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정책²⁰⁾

17) Robert Jervis, "Signaling and Perception: Drawing Inferences and Projecting Images." in *Political Psychology* 1st edi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2), pp. 293–312.

18) Roberta Wohlstetter, *Pearl Harbor: Warning and Decision* (Palo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19) Sara Bjerg Moller, "Domestic Politics, Threat Perceptions, and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 Case of South Korea, 1993–2020." *Asian Security*, Vol. 18, No. 2, 2022: pp. 119–37.

20) 인계철선 효과(tripwire effect)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개인 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견국의 인계철선(tripwire) 신호가 후견국 개인에게 어떠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하였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실험(online experiment)과 컨조인트 연구(conjoint study)를 통해 해외 배치 주둔군에 대한 공격은 보복 욕구를 일으켜 확전(escalation)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높이며 전방배치(forward deployment)가 사전 약속 이행(pre-commitment)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나 혹은 엘리트 설문(elite survey)을 통해 인계철선군이 결의(resolve)에 대한 신호로서는 작용

이나 적대국 위협²¹⁾이 정책 태도 혹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정치학 연구 전반에서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험 방법론을 활용한 관련 문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²²⁾

예컨대 개인의 기질적 선호(dispositional preference)나 특성이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문헌들은 개인의 기질에

할 수 있으나 능력(capability)에 대한 신호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Paul Musgrave and Steven Ward. "Testing Tripwire Theory Using Survey Experiments." *APSA Working Paper*, 2021: pp. 1-40; Brian Blankenship and Erik Lin-Greenberg. "Trivial Tripwires?: Military Capabilities and Alliance Reassurance." *Security Studies*, Vol. 31, No. 1, 2022: pp. 92-117.

21) Leonie Huddy, Stanley Feldman, and Christopher Weber.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erceived Threat and Felt Insecur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4, No. 1, 2007: pp. 131-53.

22) 방법론적 추세 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확한 인과추론(causal inference)에 주목하는 방법론적 추세가 관찰연구의 통계적·이론적 불확실성을 극복할 방법으로서 실험의 상대적 장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정치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심리나 인식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활용된 관찰 연구(observational research)는 일련의 가정들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확실성과 모델링한 가정들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이론적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실험은 이러한 관찰 연구의 편향을 해결하는 데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인과적 모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Alan S. Gerber, Donald P. Green, and Edward H. Kaplan. "The Illusion of Learning from Observational Research." In Ian Shapiro, Rogers Smith, and Tarek Massoud, eds., *Problem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51-252. 한편 신호이론의 관점에서 지도자 개인 차원의 심리나 특성이 국제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Michael C. Horowitz, Philip B.K. Potter, and Todd S. Sechser, "Sizing Up the Adversary: Leader Attributes and Coerc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10 (2018), pp. 2180-2204.; Keren Yarhi-Milo, Joshua D. Kertzer, and Jonathan Renshon, "Tying Hands, Sinking Costs, and Leader Attrib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10 (2018), pp. 2150-2179.; Seok Joon Kim, "Quick on the Draw: American Negativity Bias and Costly Sign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6, No. 2 (2022), pp. 246-71. 정치학, 특히 국제정치는 주요 분석 대상이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 주체의 특성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존 관찰 데이터는 인과추론 과정에서 여러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치 연구 내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던 분석 수준이 점차 미시적인 관점으로 세부화되고,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인식과 심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방법론으로서 실험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따라 신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이 이 자국의 해외파병을 결정할 때 기질적 선호(dispositional preference)와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관념을 활용한다거나²³⁾, 협력적 국제주의(cooperative internationalism)나 군사적 국제주의(militant internationalism)나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같은 개인의 도덕적 기반(moral foundation)이 외교정책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²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은 주로 미국 대중 내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외교 정책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기존 문헌은 외부 신호나 자국의 외교정책 추진에 따른 후견국 정책결정자나 후견국 대중의 기질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피후견국 개인의 특성이나 기질에 따른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²⁵⁾

2) 기존 문헌의 한계 및 소결

본 장은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를 살펴본 기존 문헌을 국가 차원 분석과 개인 차원 분석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피후견국의 동맹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은

23) Richard K. Herrmann, Philip E. Tetlock, and Penny S. Visser, "Mass Public Decisions on Go To War: A Cognitive–Interactionist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1999): pp. 553–573.

24) Joshua D. Kertzer, Kathleen E. Powers, Brian C. Rathbun, and Ravi Iyer,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2014): pp. 825–840; Joshua D. Kertzer, Brian C. Rathbun, and Nina Srinivasan Rathbun. "The Price of Peace: Motivated Reasoning and Costly Signal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4, No. 1 (2020): pp. 95–118.

25) 매몰비용과 손묶기 전략이라는 전략을 세분화시켜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실험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영역 별 신호에 따른 개인 인식 변화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그러나 해당 영역의 연구 또한 후견국/피후견국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행위자의 일반적 인식 변화 수준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살펴보고자 하는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다루지 않는다. Kai Quek, "Four Costly Signaling Mechanis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5, No. 2 (2021): pp. 537 – 49.

다음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후견국의 신호 목적을 잠재적 적대국 억제와 피후견국 안심시키기로 나누었을 때 전자에 대한 연구가 전통 안보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후견국-피후견국 간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동학이 검토되지 못했다. 게다가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동학을 다룬 기존 문헌들도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보다는 동맹에 대한 피후견국의 도덕적 해이 또는 피후견국의 동맹 이탈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정도를 탐색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후견국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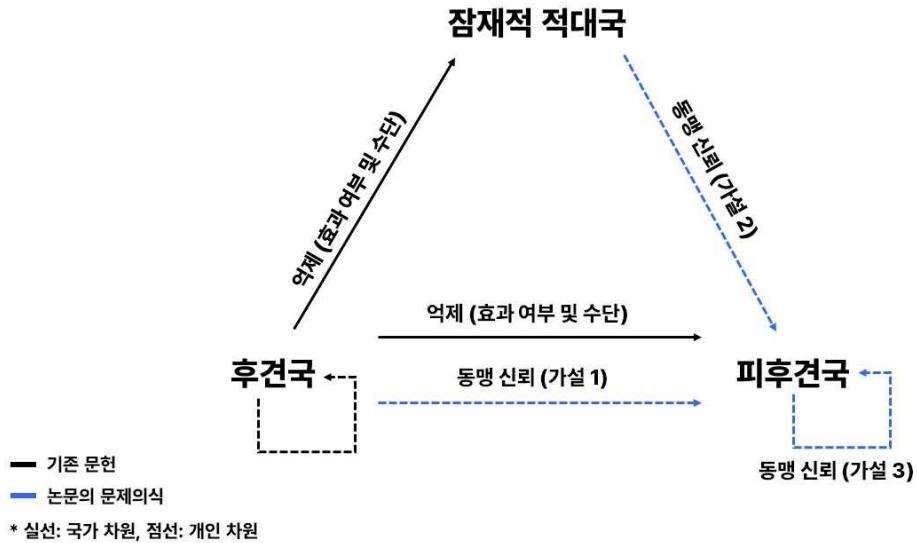
둘째, 기존 연구들이 활용한 데이터의 분석 수준은 주로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국가 차원 분석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동맹 약속 이행 신뢰”라는 심리적 현상을 일반화된 국가 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변수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방법인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신호가 대상국에게 수용 혹은 해석될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이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맹 약속 이행 수단이나 적대국 위협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도 주로 후견국 외교 정책(혹은 신호)에 대한 후견국 내 국내 청중 여론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주로 미국이 특정 외교정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미국 내 청중 여론이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 혹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가지는 평판(reputation)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하는 데에 주목해 왔으며, 이에 따라 후견국 신호나 이외 요인에 따른 동맹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 변화는 주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1)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2) 개인 차원 분석을 통해 피후견

국 내 개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며, 3) 안보를 제공하는 후견국의 입장이 아닌 안보에 대한 수요를 가진 피후견국의 관점에서 외부 신호(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와 국내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개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림 II-1]은 기존 문헌의 한계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그림 II-1] 기존 문헌 한계 및 논문의 문제의식



제 3 장. 연구 설계

본 장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후견국 신호, 잠재적 적대국 위협 수준,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존재하는 조건, 즉 분석 범위를 한정하고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신호 유형), 잠재적 적대국 위협,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 설계에서는 위에 설정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한 실험 설계 과정과 변수들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리 통계(inferential statistics)를 통한 가설-검증(hypothesis testing) 연구를 수행했으나, 본 연구는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견국의 신호 유형과 피후견국 개인의 특성이 동맹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는지 여부 및 강도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가설-검증(hypothesis-testing) 방식을 동시에 활용한다.

1. 분석 대상

동맹(alliance)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주권 국가 간 비형식적 혹은 형식적으로 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관계를 지칭하며,²⁶⁾ 양자 혹은 다자 관계 내에 포함된 모든 국가행위자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동맹은 여러

26)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1.

기준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국가 간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동맹은 다시 대칭적 관계 혹은 비대칭적 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비대칭적 군사 동맹(asymmetric military alliance)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비강대국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후견-피후견 국가관계(patron-client states relationship)를 내포한다.

후견국(patron)은 다양한 형태와 수단을 활용해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행위자를 지칭한다. 반면 피후견국(protégé)은 비강대국이면서 후견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국가행위자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향후 지칭하는 동맹 개념의 범위는 ‘두 국가가 체결하는 형식적이고 비대칭적인 군사 동맹 내 후견국-피후견국의 관계’로 한정된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억제 대상국인 잠재적 적대국(potential adversary)은 피후견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어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지닌 국가를 지칭한다.

다음으로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인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정의한다. 신뢰(credibility)는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주요한 개념 중 하나로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맥락이 달라지나,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신뢰가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이며, 상대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others)에 따라 좌우되는 개념이라고 인식한다.²⁷⁾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 내에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는 상대국(후견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을 인식하는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을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는 형식적 동맹 관계 내에서 한 국가가 상대국의 약속 이행에 대해 가지는 믿음으로 정의한다.²⁸⁾

27) Van Jackson,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20.

28) 기존 문헌들은 후견국의 신호에 대한 피후견국의 안보 보장 인식을 안심(reas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안심’을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안심은 비대칭 군사 동맹 하에서 신호를 송신하는 후견국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신호를 둘러싼 여러 동맹 유형들 내 피후견국의 인식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후견국 신호에 대한 피후견국 내의 심리적 현상을 어떻게 변

본 논문은 여러 피후견국 중 한국을 선정하여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의 동맹정책이 달라질 때 다른 여러 피후견국과 유사하게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피후견국 개인 인식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 특히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측정한 기존 데이터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후견국으로서 한국인들이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측정하는 일은 하나의 사례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논문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동맹정책을 실행했을 때 한국이 안보에 대해 느끼는 믿음이나 신뢰가 변화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주목한다. 특히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수준, 한국인의 기질적 속성이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

국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 간 관계 내에서 말(word)과 행동(deed)을 통해 자국의 결의를 상대국에게 보여주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사소통 방식을 신호(signal)라고 지칭한다.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국가의 신호에 대해 “국가의 신호란 행위자 간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의미들에 대한 성명(statement) 혹은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²⁹⁾ 이러한 개념적 이해 아래에서 피어론은 후견국의 신호가

수화하여 경험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안심보다는 신뢰도가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국 안보 보장에 대해 피후견국이 안심하는 수준을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9) Jervis, 1989, p.18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는지 혹은 청중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매몰비용 정책과 손묶기 정책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후견국은 동맹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매몰비용 정책이나 손묶기 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피어론의 신호 유형 구분과 더불어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을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약속 이행 수단은 행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종류와 방향이 다양해진다. 특히 후견국, 피후견국, 잠재적 적대국이 포함된 확장억제는 후견국-잠재적 적대국의 억제 게임 (deterrence game)과 후견국-피후견국 간 확신 게임을 모두 포함하며, 동맹 약속 이행의 목적 혹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내는 대상국과 유형이 달라진다. 다음 [표 III-1]은 피어론이 구분한 매몰비용과 손묶기 전략에 더불어 후견국이 보내는 동맹 약속 이행 신호를 유형, 분석 단위, 방향에 따라 정리한 모델이다.

[표 III-1]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개념적 유형화

신호 유형	분석 단위	신호 방향	예시 (한미동맹)
손묶기 전략 (청중비용)	양자적 (dyadic)	방향성 있음 (directed)	후견국 → 피후견국 피후견국 → 후견국 방향성 없음 (non-directed)
		상호적	가치동맹 참여 형식적 동맹 조약
	다자적 (multinational)	후견국 - 주요국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매몰비용	양자적 (dyadic)	방향성 있음 (directed)	후견국 → 피후견국 피후견국 → 후견국 방향성 없음 (non-directed)
		상호적	경제원조, 해외직접투자, 전술핵 배치, 주둔군 파병 북한 정보 공유
	다자적 (multinational)	연합군사훈련, 방위비 분담, FTA	
		해외 병 (PKO 등), 유엔사령부, 다자회담 주인	

본 연구는 후견국의 신호를 목적에 따른 상이한 대상국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라고 정의하며, 이때 신호는 청중비용을 활용하는 손묶기 전략과 매몰비용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미국의 8가지 신호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신호는 ‘대북 선언 정책, 핵 사용 가능성 발언, 유엔 안보리 대북 관련 결의안 상정, 북한 대응을 둘러싼 6자회담 추진,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 강화, 연합군사훈련 정책, 주한미군 주둔 정책, 미국과의 방위동맹 조약’을 포함하였다.

미국의 다양한 신호 중 8가지 신호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책 중 연구에서 활용하게 될 다음 8가지 정책이 한국 유권자가 개인과 가장 관련 있다고(relevant) 인식할 개연성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후견국은 피후견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보 보장 정책을 활용하지만, 특정 정책이 피후견국 개인의 믿음 체계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거나 과거에 실제로 신호가 실행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신호 유형과 방향을 가진 정책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호의 잠재적 적대국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미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호는 유형과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대상국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유권자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미국의 안보 보장 정책 중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유형과 방향을 가진 매몰비용 정책, 방향성 있는 양자 손묶기 정책, 방향성 없는 다자 손묶기 정책이 측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8가지 신호를 선정하였다.

(2)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위협은 국가행위자 간 동맹 형성의 주된 동기다. 바꾸어 말하면,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동맹 연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이론적 논의 내에서 월트(Stephen M. Walt)는 국가가 가하는 위협

수준이 종합적 국력(aggregate power),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 공격적 능력(offensive power), 공격적 의도(aggressive intention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의한다.³⁰⁾ 한편 월란더(Celeste A. Wallander)와 코헤인(Robert O. Keohane)은 위협(threat)과 위험(risk)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위협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모두 가진 국가행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국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혹은 군대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³¹⁾

위협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여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협을 과거에 국가 간 군사분쟁 경험이 있었던 경우나 혹은 국력 격차를 통해 위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외교정책 유사성 수준, 종합국력지수(CINC, Composite Indicator of National Capabilities) 등을 활용했다.³²⁾ 이러한 조작화가 ‘위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객관적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 언사’를 잠재적 적대국 위협으로 정의한다.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위협의 개념적 기준에 따르자면 과거 한국과 군사분쟁 경험이 있고, 상이한 국내 정치체제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국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군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국가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한국에게 위협으로 인지될 개연성이 높다. 더불어 북한의 다양한 위협 수단 중 위협적 언사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적 언사가 한국 내 개인의 위협인식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0) Walt, 1990, pp.21–26.

31) Celeste A. Wallander and Robert O. Keohane, “Risk, Threat, and Security Institutions,” in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2), pp.90–91.

32) Leeds and Savun, 2007, pp. 1126–1127.

(3)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

후견국의 신호와 잠재적 적대국 위협은 피후견국의 입장에서 외부 행위자로부터 오는 상황 변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타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타국의 행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해석하는 피후견국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수용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의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개인이 1) 일관된 기질적 믿음 체계(dispositional belief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2) 구체적인 상황 내에서 특정한 행동 방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도구적 계산(instrumental calculations)을 내린다.³³⁾ 이를 연구에 적용한다면, 피후견국 개인은 일관된 기질적 믿음 체계를 활용하여 동맹이 자국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계산을 기반으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대중의 인식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을 동일시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들은 인간 개인의 공통적인 기질이나 특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대중의 인식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을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는 대중보다 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으며, 이러한 정보 접근성은 대중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도자-대중 간 인식 차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두 인식 간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으며, 지도자가 아닌 일반 대중에 속하는 개인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만 집중한다.

33) 두 가정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입장은 상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Herrmann et al, 1999, pp. 553-554 참고.

2. 가설 설정

질문 1에 대한 가설 1은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확인한다.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은 크게 매몰비용 정책과 손묶기 정책으로 구분하며, 손묶기 정책의 경우 양자 정책과 다자 정책으로 분류된다. 세 유형의 신호는 매몰비용 정책, 양자 손묶기 정책, 다자 손묶기 정책 순으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두 가지 하위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후견국의 매몰비용은 양자 혹은 다자 손묶기 정책보다 높은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효과를 보이리라고 예상한다. 이는 매몰비용이 다른 신호들에 비해 가시적, 물질적 특성을 가지므로 피후견국 개인의 안보 보장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한미동맹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연합군사훈련 등 주요한 매몰비용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둘째, 가설 1-2는 손묶기 정책 내 신뢰 효과를 비교한다. 후견국의 양자 손묶기 정책은 다자 손묶기 정책보다 높은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효과를 보이리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여러 국가 행위자가 포함된 안보 공약이 양자 안보 공약에 비해 낮은 정책 효과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추론에 기반한다.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위자가 참여할 수록 의사소통 수단이 많아지고 진행 과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6자회담 무용론³⁴⁾과 같이 다자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던 기존

34)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2002년 2차 핵 위기 이후 진행된 6자회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80만 톤의 중유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대가를 제공하고 농축우라늄프로그램(Uranium Enriched Program, UEP) 공개를 명목으로 시간을 벌게 했으며,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거나 다자외교를 통해 자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한다. 최종건. (2012),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1권 1호

의 국내 담론을 고려한다면 다자 손묶기 정책보다는 양자 손묶기 정책이 오히려 피후견국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인식되리라고 보았다.

가설 1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 1-1: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매몰비용 정책을 손묶기 정책보다 더 신뢰할 것이다. (동맹 약속 이행 수단)
- 1-2: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양자 손묶기 정책을 다자 손묶기 정책보다 더 신뢰할 것이다. (손묶기 정책의 행위자 수)

두 번째 가설은 높은 수준의 잠재적 적대국 위협을 인식하는 응답자 일수록 후견국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더 낮은 신뢰를 보이리라고 추론한다. 가설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인과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후견국은 연루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동맹 약속 이행을 축소하게 되며, 이러한 후견국의 이행 의지 감소는 피후견국 내 개인으로 하여금 후견국 안보 보장 정책을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후견국은 높은 위협으로 인해 약해진 피후견국에게 동맹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후견국이 가진 억약 부강의 논리, 즉 약소국을 억압하고 강대국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약한 국력을 가진 국가에 대해 동맹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메커니즘은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수준에 따라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후견국의 의지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도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인과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전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피후견국 개인이 자국의 국방력만으로는 잠재

적 적대국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 자국 국방력이 상대국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국가는 다른 외부 옵션을 추구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외재적 균형인 동맹에 대한 수요를 느끼게 된다. 둘째, 피후견국 개인은 후견국의 국력이 자국의 국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국 국방력만으로 충분한 억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후견국은 위협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국보다 국방력이 강한 동맹국의 안보 보장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높은 국력을 보유한 후견국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일 수 있다.

가설 2 (잠재적 적대국 위협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가설 2-1: 잠재적 적대국 위협이 높을수록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3은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 체계에 따라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기존 문헌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 안보 문헌들은 한 국가가 상대국이 위협 혹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혹은 반복적 협력 관계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관점으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신뢰는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 국가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신호를 받아들인 국가가 이를 어떻게 해석 혹은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치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신호는 이를 받는 행위자가 보내는 행위자의 신호 수신을 원래의 의도와 동일하게 받아들인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35) Robert Jervis, Keren Yarhi-Milo, and Don Casler, “Redefining the Debate Over Reputation an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ecurity: Promises and Limits of New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73, No. 1 (2021): pp. 167–203.

가설 3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확장억제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는 후견국의 신호나 잠재적 적대국 위협 신호가 존재할 때 자동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반응적인 특성을 가지기보다는 피후견국 내 개인의 믿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형성 및 변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개인 인식 변수를 크게 정치 이념과 대북정책 태도로 분류하였다.

정치 이념은 개인이 공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관계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을 연구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도 진보-보수의 이념적 특성이 개인의 믿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본다.³⁶⁾ 한국의 경우,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진 개인일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리라고 추론하였다. 한국 내에서 보수 정당은 일반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보장 정책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진보 정당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일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보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보수 정치 성향을 가진 개인이 진보 정치 성향을 가진 개인에 비해 더 높은 신뢰를 보이리라고 추론하였다.

둘째, 대북정책 태도는 대북 강경 노선과 대북 온건 노선에 대한 선호를 지칭한다. 개인의 기질이 국제정치와 연관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군사적 공격성에 대한 태도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다루었다. 특히 외교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매파(hawkish)인지 아니면 비둘기파

36) Herrmann et al, 1999, p.553; Shoon K. Murray, Anchors against Change: American Public Opinion Leaders' Beliefs After the Cold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ruce Russett, Thomas Hartley, and Shoon K. Murray. "The End of the Cold War, Attitude Change, and the Politics of Defense Spending."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Vol. 27, No. 1 (1994): pp. 17-21.

(dovish)인지에 대한 구분은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efficacy of force)을 보여준다.³⁷⁾ 구체적으로, 매파적 특성을 가진 개인은 경쟁적 요소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비둘기파적 특성을 가진 개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³⁸⁾ 한미동맹이 한국의 군사력 능력 유지와 전쟁 억제를 위한 협력적 관계에 해당하므로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동맹에 대해 신뢰한다고 본다. 다만 강경파가 군사적 능력 유지를 위해 동맹을 신뢰하는 정도가 온건파가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동맹을 신뢰하는 정도보다 더 높으리라고 예상한다.

가설 3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가설 3-1: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진 피후견국 개인일수록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더 신뢰할 것이다.

가설 3-2: 강경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피후견국 개인일수록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더 신뢰할 것이다.

37) Keren Yarhi-Milo, *Who Fights for Repu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33.

38) Bruce Russett, "Doves, Hawks, and US Public Opin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5, No. 4 (1990): pp. 515-538.

제 4 장. 실증 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분석 단위 및 데이터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을 통해 확보한 915명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주 간 설문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³⁹⁾ 주요 연구 대상인 후견국은 미국, 피후견국은 한국, 잠재적 적대국은 북한으로 대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방법론은 실험 설계 중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활용했다.⁴⁰⁾ 설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실험 순서도⁴¹⁾

39) 본 설문의 처치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디자인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IRB 심의를 받기 전 1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분석에서 수정된 버전의 설문지를 본 조사에서 활용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저자가 직접 확보한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한민국 성인 샘플을 대상으로 총 1회의 사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보한 마스터샘플 100명을 대상으로 1회의 파일럿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설문지와 실험 설계를 확정한 후 2022년 3월 22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로부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실험은 2022년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총 5일 동안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을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성인남녀 91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논문은 설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40) 집단 간 설계는 표본 내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다. 반면 집단 내 설계(within-group design)는 처치 제공 전과 후에 각각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설정하여 처치효과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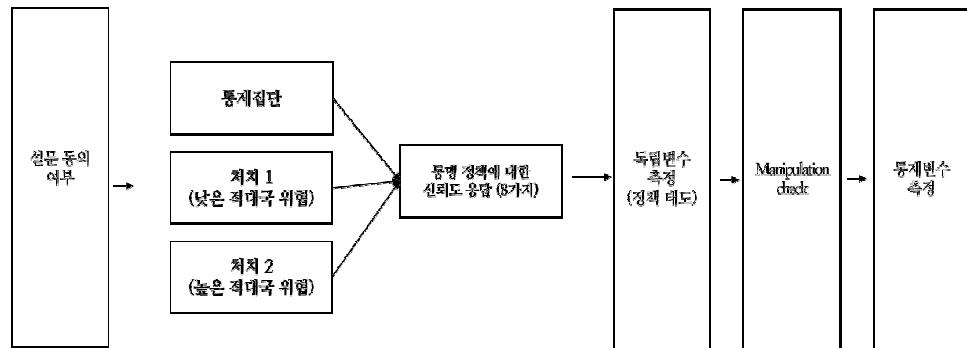
41) 본 연구는 설문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지만 맥락이 상이한 두 개의 실험디자인을 포함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중 잠재적 적대국 위협 수준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를 살펴본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에서 얻은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1) 설문 시작

(2) 집단 별 치치 (실험 2)

(3) 주요 종속변수

(4)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실행하고 있는 8가지 안보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수준을 신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합한 뒤 평균을 낸 값을 0과 1 사이 수로 재설정(rescale)하였다.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수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매몰비용 정책에 대한 신뢰’는 연합군사훈련 정책, 주한미군 주둔 정책, 방위동맹 조약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평균값, ‘양자 청중비용 정책에 대한 신뢰’는 대북 선언 정책, 핵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평균값, ‘다자 청중비용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대북 6자회담 추진, 가치(인권, 민주주의) 중심 동맹 강화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양자 청중비용과 다자 청중비용은 잠재적 적대국, 피후견국, 더 범위를 넓힌다면 국제사회를 대상국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정책 실행 시 주요 행위자가 후견국 단독으로 이루어져 양자적 신호의 특성을 띠는지 혹은 후견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포함되어 다자적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통해 구분하였다.

3) 처치변수 및 설명변수

(1) 실험 처치: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위협’ 변수는 응답자가 북한이 실제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는 정보를 받을 때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일반적 혹은 추상적 관념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응답을 수집한다면 응답자의 정확한 위협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 기법을 통해 관찰 데 이터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잠재적 적대국의 구체적 위협 정보를 받은 피후견국 개인이 위협 정보를 받지 않은 개인에 비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보에 대한 설문 실험을 진행했던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가설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를 활용하여 처치를 제공하였다. 가설적 시나리오란 현실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만약 특정한 일이 발생한다면(what if)?’이라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사고를 통해 구성한 가상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적 시나리오의 활용은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점은 높은 처치 효과를 얻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현실과 다소 거리감 있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서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실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동시에 외적 타당성을 희생하게 된다. 즉, 실제 상황과 거리감 있는 가상의 정보를 통한 처치 효과는 현실에 대한 보편화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개연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높은 처치효과보다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른 한국인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오늘 날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언사를

기반으로 처치변수를 설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실험방법론을 활용하는 다수의 정치학 연구들이 처치 정보를 구성할 때 정치적으로 알맞은 맥락 (politically relevant context)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⁴²⁾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915명의 전체 응답자를 임의화 (randomization) 과정을 통해 각 305명을 ‘통제집단, 처치집단1, 처치집단2’로 분류한다.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처치집단 1에는 약한 수준의 적대국 위협 정보를, 처치집단2에는 높은 수준의 적대국 위협 정보를 제공한 후 미국의 안보보장 정책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다.

북한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레토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위협 정보를 보여주는 처치집단 1에서는 2022년 1월에 보도되었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제시했다.⁴³⁾ 처치집단 2의 경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발언과 함께 1차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 핵실험에 대한 자부심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신년 공동사설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⁴⁴⁾

[표 III-2] 실험 처치 텍스트

처치	텍스트	N
통제	없음	305
처치 1 (낮은 위협)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한 후 6일만인 1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	305

42) James N. Druckma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2006): p.629.

43) 한겨레, “북 “극초음속미사일 1000km 표적 명중”...김정은, 1년 10개월만에 참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26959.html>

44)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

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듣고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6일만인 1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북한 외무성은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치 2 (높은 위협)

(2) 설명변수

1) 위협인식 (가설 2)

가설 2 검증을 위해 처치변수 이외에도 피후견국의 위협인식을 보여 주는 대리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⁴⁵⁾ 위협인식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인식과 한국과 북한 간 상대적 국력 차 인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인식은 ‘귀하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위협적), 2(약간 위협적), 3(중간), 4(약간 위협적이지 않음), 5(매우 위협적이지 않음) 중 하나를 응답 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상대적 국력 차 인식의 경우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의 국방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강함), 2(약간 강함), 3(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음), 4(약간 약함), 5(매우 약함) 중 하나를 응답하도록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상대적 국력 차 인식 응답이 5로 갈수록 북한보다 한국의 국방력이 크게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높은 군사적 위협을 느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 성향 (가설 3-1)

‘정치 성향’은 정치 성향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으로서 ‘귀하의 일반적인 정치 성향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보수적), 2(다소 보수적), 3(진보도 보수도 아님), 4(다소 진보적), 5(매우 진보적)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처치변수와 대리변수(위협인식)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추론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예를 들어, 처치변수와 대리변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경우, 기존에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던 응답자들이 처치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위협을 통해 위협인식을 업데이트하여 동맹 약속 이행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리변수만 유의미성을 가지는 경우, 응답자들의 위협인식이 동맹 약속 이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북한의 위협 언사 정보에 대한 노출이 기존 위협인식을 업데이트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3) 대북정책 태도 (가설 3-2)

대북정책 태도는 ‘귀하는 대북 강경 노선과 온건 노선을 각각 얼마나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 내에서 ‘대북 강경 노선(대북제재 강화, 대북 방송 재개 등)’과 ‘대북 온건 노선(남북간 경제협력 증진, 남북간 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 각각 1(매우 선호), 2(조금 선호), 3(보통), 4(조금 선호하지 않음), 5(매우 선호하지 않음)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통제변수

위협인식에 대한 대리변수를 활용한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설문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인구학적 정보는 성별, 연령, 지역, 종교, 종사 산업, 소득,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2. 분석 모형

본 장에서는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견국의 이행 방식,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피후견국의 국내적 특성에 따라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개인의 신뢰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후견국의 이행 방식에 따른 신뢰 변화 추정은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보고한다. 기술통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해당 변수가 가진 특성에서 기인한다. 설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으로부터 높은 위협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신호(8가지 동맹정책 중 하나)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안내되었으며, 첫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신호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들끼리 묶어 ‘매몰비용 정책에 대한 신뢰’, ‘양자 손묶기 정책에 대한 신뢰’, ‘다자 손묶기 정책에 대한 신뢰’ 변수를 새로 생성했다. 다시 말해, 위의 세 가지 변수의 값 자체가 특정한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별도의 회귀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과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는 최소자승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6가지 모델을 활용하였다. 모델 1, 2는 가설 2 검증을 위해 설정되었다. 모델 1의 경우 처치변수의 효과만을 살펴보며, 모델 2는 대리변수인 두 가지 위협인식(북한 핵보유, 상대적 국력 차)과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모델 3은 개인의 정치성향과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가설 3-1인 정치성향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모델 4는 대북정책 태도(강경/온건)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가설 3-2를 검증한다. 모델 5는 모델 3과 4를 종합한 모델이며, 모델 6은 가설 2와 3에서 활용된 모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델이다.

3. 분석 결과

1)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따른 신뢰 변화

동맹 약속 이행 방식(혹은 신호 유형)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 변화는 다음 [표 IV-1]에 제시된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 정책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신뢰’는 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주둔, 방위동맹 조약, ‘양자 청중비용 정책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신뢰’는 대북 선언 정책, 핵 사용 가능성 발언, ‘다자 청중비용 정책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신뢰’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대북 6자회담 추진, 가치 동맹 강화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평균값은 후견국 신호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중간값인 3을 넘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미국이 보내는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신호 유형에 따라서는 매몰비용 정책, 다자 손묶기 정책, 양자 손묶기 정책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매몰비용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의 예상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다자 손묶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양자 손묶기 정책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는 논문이 예상한 결과와 달랐다.

[표 IV-1] 기술통계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수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매몰비용 정책	915	3.91	.9	1	5
양자 손묶기 정책	915	3.34	1.06	1	5
다자 손묶기 정책	915	3.43	.88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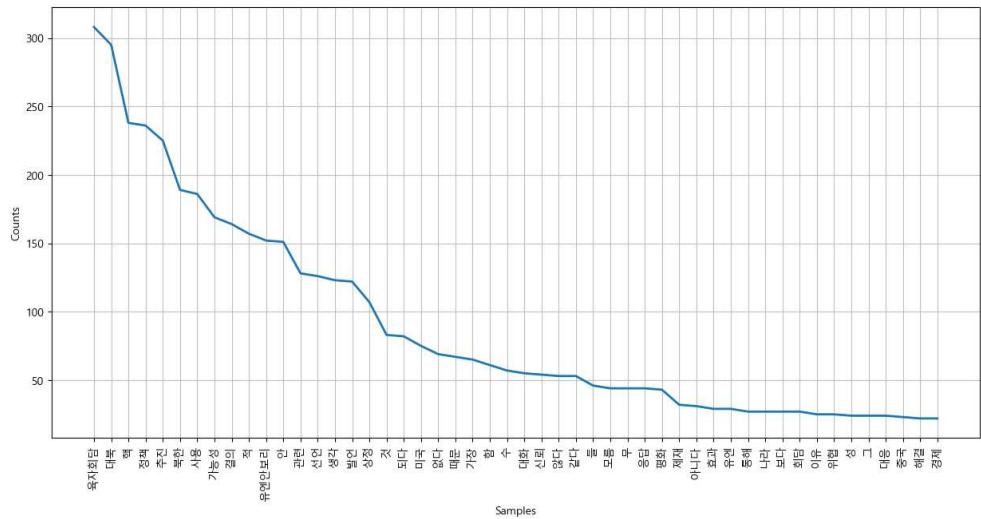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왜 다자 손묶기 정책을 양자 손묶기 정책보다 더 신뢰하는가? 이러한 상대적 신뢰를 설명하는 인과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결과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위의 두 가지 추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활용한 텍스트분석을 추가로 진행했다. 기술통계 결과는 선호 여부와 약속 이행 방식 간 상대적 선호 수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다자 손묶기 정책을 양자 손묶기 정책에 비해 신뢰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텍스트분석을 활용한다면 응답자들의 선호 수준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호 이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내 개인의 인식이 작동하는 인과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방형 질문에서는 설문지에서 제시했던 미국의 8가지 안보 보장 정책을 북한에 대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 가장 신뢰하는 정책과 그 이유를 각각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개방형 응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질적 코딩이다. 개방형 응답에서 응답의 빈도를 구분하고, 내용적 유사성을 가지는 응답 항목들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질적 코딩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한편 질적 코딩은 연구 결과의 객관성 혹은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서 텍스트분석을 활용하여 단어 등장 빈도를 시각화하였다.⁴⁶⁾

[그림 IV-1]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정책에 대한 개방형 응답 텍스트의 단어 등장 빈도이다. 응답에서 100회 이상 사용된 유의미한 단어는 ‘6자회담, 대북, 핵, 정책, 추진, 북한, 사용, 가능성, 결의, 유엔안보리, 선언, 발언, 상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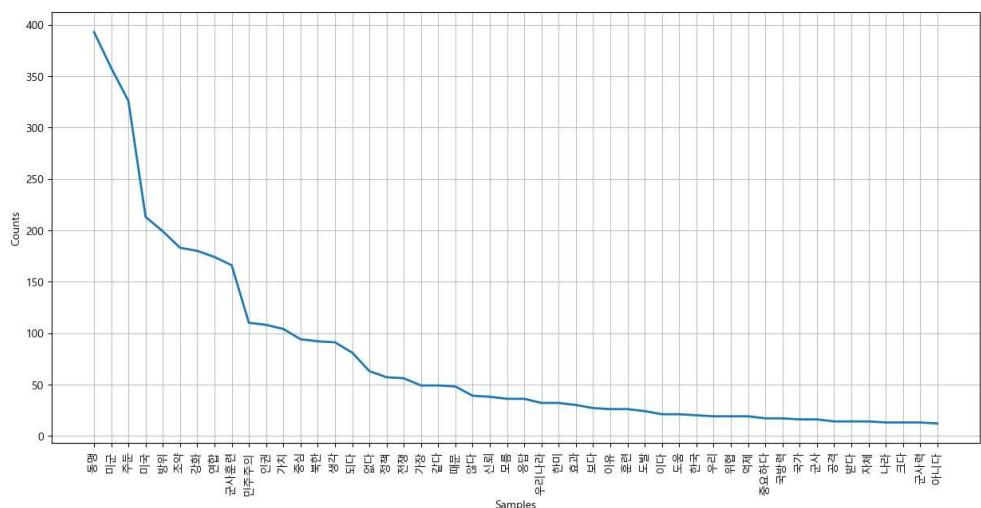
46) 단어 등장 빈도 시각화는 파이썬(Python)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y를 활용하였다. 해당 패키지에서는 숫자와 문자를 구분된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임의로 ‘6자 회담’을 ‘육자회담’으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개방형 응답에 저장된 텍스트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전환한 후 형태소를 나누어 품사를 구분하였다. 이후 불용어를 설정 및 제거한 뒤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인 matplotlib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림 IV-1]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대북정책 선호)



[그림 IV-2]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정책에 대한 개방형 응답 텍스트의 단어 등장 빈도다. 응답에서 100회 이상 사용된 유의미한 단어는 ‘동맹, 미군, 주둔, 미국, 방위, 조약, 강화, 연합, 군사훈련, 민주주의’였다.

[그림 IV-2]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동맹정책 선호)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할 때, 다자 손묶기 정책으로 포함된 6자회담 추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가치(인권, 민주주의) 중심 동맹 강화 정책이 모두 신뢰도 높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에 대한 선호 이유를 밝힌 응답자들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자회담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제재나 위협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가 가장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강대국의 압박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다.’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국제기구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제재의 필요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가치 중심 동맹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는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양자 손묶기 정책으로 포함된 대북 선언 정책이나 핵 사용 가능성 발언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개인들은 다자 손묶기 정책들을 선호하는 개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나, 대북 선언 정책에 대한 선호 이유를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간접적인 방식보다 직접적인 선언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실효성 있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핵 사용 가능성 발언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핵 공격이므로 핵 사용에 대한 발언이 상호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호의 이유로 들었다.

2) 잠재적 적대국 위협 수준에 따른 신뢰 변화

다음은 가설을 검증하기 전 설문 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몇 가지 응답을 통해 가설 제기 과정에서 설정했던 이론적 전제가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및 이론적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1) 피후견국이 후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2) 피후견국 자국의 국방력만으로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충분한 억제가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 전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력이 미국의 국방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1(매우 약함)에서 5(매우 강함)까지의 범위에서 평균은 1.8, 표준편차는 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국 국방력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피후견국의 국방력이 적대국 억제에 충분하지 않음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개인의 위협인식을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한국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이 가진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응답 결과,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을 1(매우 위협적이지 않음)에서 5(매우 위협적)까지의 범위에서 평균은 3.6, 표준편차는 1.0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평균보다 약간 넘는 수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서 두 번째 가설이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를 확인하였다.

[표 IV-2] 기술통계 (가설 2의 이론적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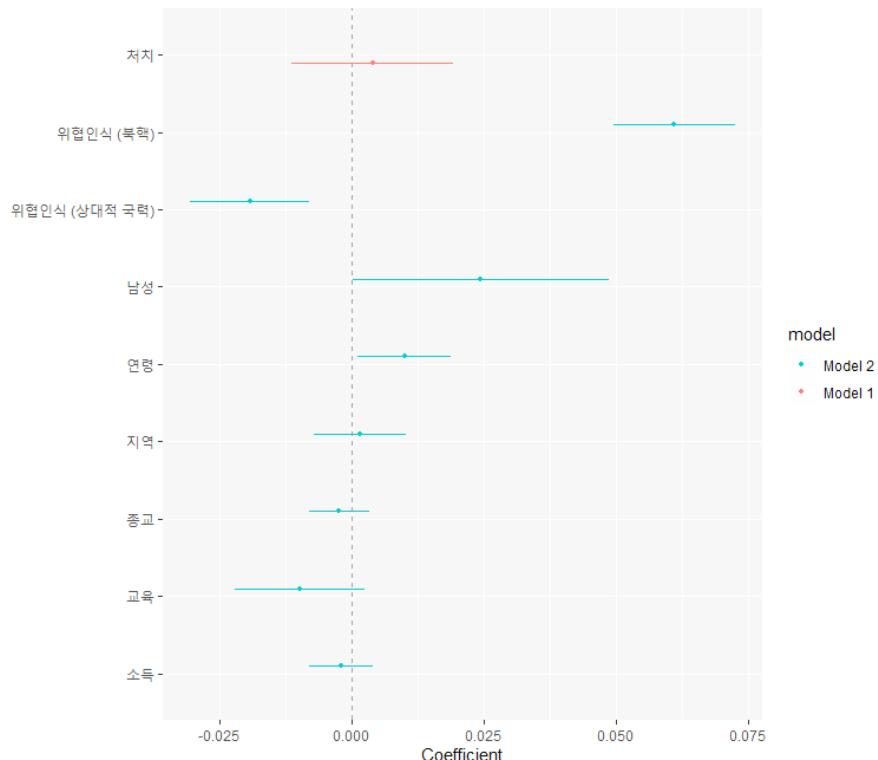
변수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대적 국력 인식 (미국)	915	1.80	1.00	1	5
위협 인식 (북한 핵보유)	915	3.68	1.05	1	5

다음으로는 적대국 위협 수준이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다. [그림 IV-3]은 적대국 위협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OLS 분석 결과이다. 본 논문이 처치변수로 설정했던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수준’이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가설 2를 기각한다. 처치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호효과(interaction effect)나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확인한 경우에

도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⁴⁷⁾

그러나 위협인식 변수들은 각각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는 동시에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과 개인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우리나라와 북한 간 국력 차이 인식에 대한 변수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국력이 더 강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오히려 동맹 약

[그림 IV-3] 잠재적 적대국 위협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



속 이행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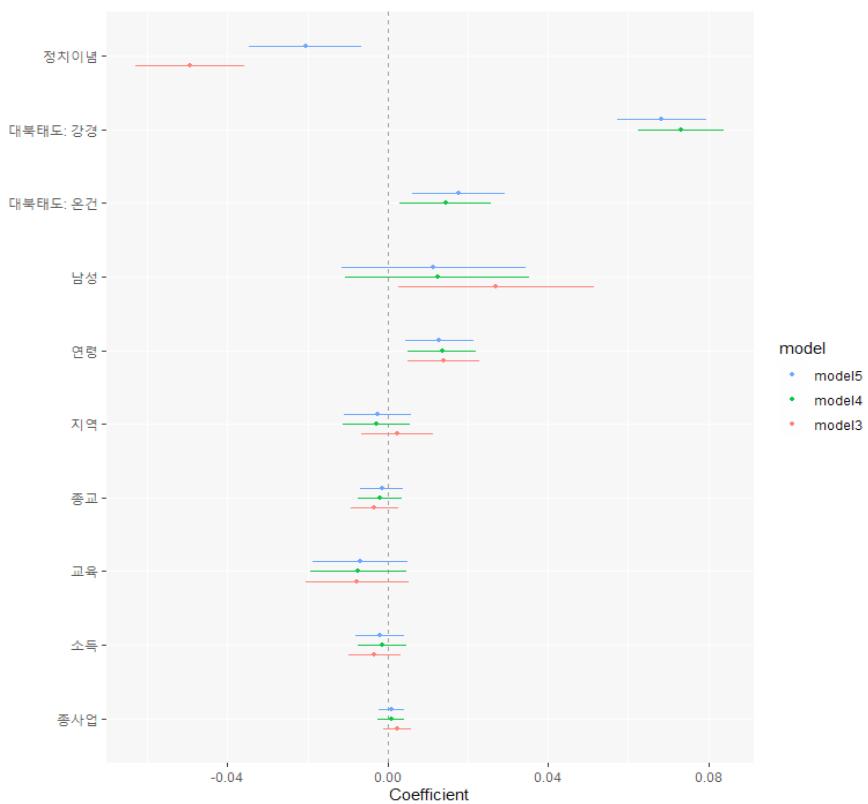
47) 다양한 맥락 내에서 처치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 매개효과 등을 분석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정부에 대한 선호도’ 변수가 유일하게 처치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효과가 어떠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후전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잠재적 적대국 위협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후속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 피후견국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동맹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나아가 동맹 이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과 연령만 약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었다.

3) 피후견국 개인 특성에 따른 신뢰 변화

다음으로 가설3 검증을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4]은 피후견국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에 대한 OLS 분석 결과이다. 가설 3-1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치이념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성향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 3 내에서 정치성향은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으며, 대북정책

[그림 IV-4] 피후견국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



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모델 4에서는 정치성향의 계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2의 주요 독립변수인 대북태도(강경/온건)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북정책 태도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 4, 가설 3-1에 대한 정치성향 변수를 포함한 모델 5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으며, 본 논문의 가설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강경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개인이 온건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개인보다 후견국에 대해 더 높은 동맹 약속 이행 신뢰를 보였다. 이를 종합할 때, 가설 3-1과 가설 3-2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유의미성을 가지므로 가설 3을 수용한다.

다음으로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과 피후견국 내 개인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 변화를 확인한 전체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적대국 위협 및 기질적 특성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OLS)

종속변수:						
후견국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가설 2						
처치	0.004 (0.008)				0.003 (0.007)	
위협인식(북한 핵보유)		0.061 *** (0.006)			0.044 *** (0.006)	
위협인식 (국력 차)			-0.019 *** (0.006)		-0.026 *** (0.005)	

가설 3-1					
정치성향	-0.049*** (0.007)	-0.021*** (0.007)	-0.016** (0.007)		
가설 3-2					
대북태도 (강경)	0.073*** (0.005)	0.068*** (0.006)	0.061*** (0.006)		
대북태도 (온건)	0.014** (0.006)	0.018*** (0.006)	0.011** (0.006)		
통제변수					
남성	0.024** (0.012)	0.027** (0.012)	0.012 (0.012)	0.011 (0.012)	-0.001 (0.012)
연령	0.010** (0.004)	0.014*** (0.005)	0.014*** (0.004)	0.013*** (0.004)	0.011** (0.004)
지역	0.001 (0.004)	0.002 (0.005)	-0.003 (0.004)	-0.003 (0.004)	-0.003 (0.004)
종교	-0.002 (0.003)	-0.003 (0.003)	-0.002 (0.003)	-0.002 (0.003)	0.0004 (0.003)
교육	-0.010 (0.006)	-0.008 (0.007)	-0.007 (0.006)	-0.007 (0.006)	-0.006 (0.006)
소득	-0.002 (0.003)	-0.003 (0.003)	-0.001 (0.003)	-0.002 (0.003)	-0.001 (0.003)
종사업		0.002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0.002)
Constant	0.644*** (0.010)	0.477*** (0.040)	0.772*** (0.043)	0.356*** (0.044)	0.424*** (0.050)
Observations	915	915	915	915	915
Note:				* p *** p	p < 0.01

4. 소결

실증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후견국 개인은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안정적인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행 방식에 따라서는 매몰비용, 다자 청중비용, 양자 청중비용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였다. 텍스트분석 결과는 한국 내 개인이 본 논문의 예상과 달리 왜 다자 청중비용을 통한 동맹 약속 이행을 양자 청중비용 활용보다 선호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이 후견국에 대한 피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보내는 위협적 레토릭을 실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높은 위협에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노출되어 북한이 실제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적 레토릭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학습 혹은 적응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위협에 대한 일상적 경험이 북한이 보내는 위협에 대한 신뢰(threat credibility)를 변화시키지 않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즉, 전시상황이 지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적대국의 위협은 피후견국 개인의 동맹 약속 이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적대국에 대한 기존의 위협인식(대리변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적 결과는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새로운 가설 설립을 통한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우선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끼며 동시에 핵 보유에 대한 위협이 높을수록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상대적 국력 차 인식의 경우,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개인이 오히려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적대국 대비 피후견국의 낮은 국

방력이 높은 위협인식으로 이어져 안보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동맹과 같은 외부 수단에 대한 높은 의지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기존의 통념과 대치된다.

셋째, 피후견국 내 개인의 기질적 특성은 후견국에 대한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개인일수록 미국의 약속 이행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개인일수록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다.

제 5 장. 결 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후견국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다. 기존 문헌은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이 잠재적 적대국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하여 후견국의 신호가 피후견국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고, 대부분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관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간 신호게임에 따른 국내적 동학 변화 혹은 개인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문헌도 주로 후견국 개인 인식 변화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롭게 생성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따른 한국인의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했다. 자세히 부연하자면,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후견국의 이행 방식에 따른 피후견국 개인의 신뢰를 보고한 후 OLS 분석을 통해 미국의 8가지 동맹정책에 대한 개별적 신뢰 수준의 평균값으로 구성한 종속변수(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처치변수(북한의 위협적 레토릭)와 주요 독립변수(위협인식, 정치성향, 대북정책 태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개방형 설문을 활용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가설 1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완하는 동시에 처음에 추론하지 못했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후견국의 이행 방식’과 ‘피후견국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잠재

적 적대국 위협이 후견국에 대한 피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선 처치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 처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높은 처치 효과보다는 외적 타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처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연구 설계의 본래 의도를 생각했을 때, 처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위협적 레토릭이 한국 내 개인의 위협이나 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내 개인의 위협인식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상대적 국력 차에 따른 개인의 위협인식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협 인식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두 가지 대리변수의 상반된 결과는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하며, 추후 ‘위협인식’ 변수의 조작화에 대한 논의와 더 많은 경험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다만 위의 두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1) 재래식 위협이 아닌 핵 위협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2) 북한 대비 한국이 가진 재래식 국력 우위에 대한 인식이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세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을 탐구하였다. 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은 후견국의 국내외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예를 들어, 후견국은 유사 시 동맹국과의 안보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치 유권자 및 국제사회의 비판이라는 청중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쇠퇴가 종종 거론되는 오늘날 동맹국 관리나 안보공약 준수

여부는 국제체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과 이에 따른 첫 번째 가설은 후견국의 어떤 동맹 약속 이행 방식이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높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믿음 체계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어떤 동맹 약속 이행 수단이 한국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수용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한미동맹, 넓게는 후견국으로서 미국의 평판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잠재적 적대국 위협에 따른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는 동맹에 대한 기존 연구의 통념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동맹은 전통적으로 외부 위협에 대한 두 국가의 반응 현상으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적대국 위협의 변화가 동맹 동학의 변화를 설명하리라는 통념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적대국 위협이 반드시 피후견국 개인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경험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1) 북한의 위협적 레토릭은 오늘날 한국인의 위협인식이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2) 북한의 재래식 위협보다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위협인식이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을 신뢰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결과를 해석 및 추후 연구를 통해 탐색하는 일은 오늘날 북한 위협에 따른 한미동맹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셋째, 피후견국 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관찰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문헌은 상대국이 대상국에게 주는 신호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신호는 신호를 해석하는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수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식 변화가 외부적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기질적 특

성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설 1, 가설 2의 처치변수를 활용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를 살펴 보고, 가설 2, 가설 3의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개인의 기질에 따른 인식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는 동맹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이 상황적(situational)인지 아니면 기질적(dispositional)인지를 구분하여 정치심리학적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 문제다. 본 논문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한국 유권자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본 실험에 통제했던 환경과 달리 국가 안보 및 북한 위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취사선택하여 수용할 개연성이 높다. 달리 말하자면, 실험 대상이 처치에 대한 일시적 영향만을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이 활용했던 설문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발전된 패널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논문이 탐구하고자 했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경험적 증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한적 분석 범위(scope condition)에 따른 한계다. 본 논문은 후견국-피후견국 간 관계에서 피후견국이 자국의 국력만으로는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을 충분하게 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후견국이 피후견국보다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임을 인식해야 하며, 후견국-피후견국이 반복적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위기 시 상대국이 자국과 협력 하리라는 기대 혹은 신뢰를 형성해야 함을 이론적 전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전제를 벗어난 후견국-피후견국의 동맹 약속 이행 방식에 대한 신뢰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관점을 고민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는 경험적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와 특수성이 한국인의 인식 형성에 미친 영향을 내포하고 있을 개연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추후 질적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동맹 약속 이행 신뢰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으나,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특정 요인을 인식 변화의 동기로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텍스트분석을 통해 가설 1에 대한 인과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가설 2와 가설 3을 설명하는 인과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 및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안보 주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이 공백을 메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문자료

- 김지용. (2014).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제54권 4호, pp. 195–232.
- 손상용 & 박종희. (2020).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2호, pp. 175–204.
- 조동준. (2018).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pp.123–148.
- 최종건. (2012).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1권 1호 pp.15–21.
- 통일연구원. (2007).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2. 영문자료

- Avey, Paul C. (2018). "The Historical Rarity of Foreign-Deployed Nuclear Weapon Crises." *Security Studies* Vol 27, No.1, pp.89–119.
- Benson, Brett V. (2012). *Constructing International Security: Alliances, Deterrence, and Moral Haz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son, Brett V., Patrick R. Bentley, and James L. Ray. (2013). "Ally Provocateur: Why Allies Do Not Always Behav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0, No. 1, pp.47–58.
- Benson, Brett V., Adam Meiowitz and Kristopher W. Ramsay. (2014). “Inducing Deterrence through Moral Hazard in Alliance Contra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2, pp.1–29.

- Blankenship, Brian, (2020). "Promises under Pressure: Statements of Reassurance in US Allian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4, No. 4 : pp.1017–1030.
- Blankenship, Brian and Erik Lin-Greenberg. (2022). "Trivial Tripwires?: Military Capabilities and Alliance Reassurance." *Security Studies* Vol. 31, No. 1, pp.92–117.
- Bleek, Philipp C. and Eric B. Lorber. (2014). "Security Guarantees and Allie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pp.429–454.
- Cha, Victor D. (2000).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pp.261–291.
- Danilovic, Vesna. (2001). "The Sources of Threat Credibility in Extended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3, pp.341–369.
- Dorussen, Han, Erik A. Gartzke, and Oliver Westerwinter. (2016). "Networked International Politics: Complex Interdependence and the Diffusion of Conflict and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3, No. 3, pp.283–291.
- Druckman, James 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2006).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pp.627–635.
- Edry, Jessica, Jesse C. Johnson, and Brett Ashley Leeds. (2021). "Threats at Home and Abroad: Interstate War, Civil War,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3, pp.837–857.
- Freedman, Lawrence and Jeffrey Michaels. (2019). *The Evolution of*

- Nuclear Strategy :New, Updated and Completely Revised.*
(Basingstoke : Palgrave Macmillan).
- Fearon, James D., (1994).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pp.236–269.
- _____, (1995).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pp.379–414.
- _____, (1997).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 pp.68–90.
- Fuhrmann, Matthew and Sechser, Todd S., (2014a). "Nuclear Strategy, Nonproliferation, and the Cause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pp.455–480.
- _____, (2014b).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pp.919–935.
- Gerber, Alan S., Donald P. Green, and Edward H. Kaplan. (2004). "The Illusion of Learning from Observational Research." In Ian Shapiro, Rogers Smith, and Tarek Massoud, eds., *Problem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rmann, Richard K., Philip E. Tetlock, and Penny S. Visser. (1999). "Mass Public Decisions on Go To War: A Cognitive-Interactionist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pp.553–573.
- Horowitz, Michael C., Philip B. K. Potter, and Todd S. Sechser. (2018).

- "Sizing Up the Adversary: Leader Attributes and Coercion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10, pp.2180–2204.
- Howard, Michael. (1982). "Reassurance and Deterrence: Western Defense in the 1980s." *Foreign Affairs* Vol. 61, No. 2, pp.309–324.
-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and Christopher Weber. (2007).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erceived Threat and Felt Insecur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4, No. 1, pp.131–53.
- Huth, Paul. (1988).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CT: Yale University Press).
- Jackson, Van. (2016).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2002). "Signaling and Perception: Drawing Inferences and Projecting Images." in Kristen Renwick Monroe ed.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 Jervis, Robert, Keren Yarhi-Milo, and Don Casler. (2021). "Redefining the Debate Over Reputation an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ecurity: Promises and Limits of New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73, No. 1, pp.167–203.
- Jo, Dong-Joon, and Erik Gartzke.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pp.167–94.
- Johnson, Jesse C. (2017).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3, pp.736–745.
- Kertzer, Joshua D., Kathleen E. Powers, Brian C. Rathbun, and Ravi

- Iyer. (2014).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pp.825–840.
- Kertzer, Joshua D., Brian C. Rathbun, and Nina Srinivasan Rathbun. (2020). "The Price of Peace: Motivated Reasoning and Costly Signal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4, No. 1, pp.95–118.
- Ko, Ji Young. (2019). "Alliance and Public Preference for Nuclear Forbear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5, No. 4, pp.509–529.
- Kim, Seok Joon. (2022). "Quick on the Draw: American Negativity Bias and Costly Sign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6, No. 2, pp.246–271.
- Kydd, Andrew H. (2005). *Trust and Mistru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ydd, Andrew H. and Roseanne W. McManus. (2017). "Threats and Assurances in Crisis Bargaining."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1, No. 2, pp.325–48.
- Lai, Brian and Dan Reiter. (2000).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2 : pp.203–227
- Leeds, Brett Ashley and Burcu Savun. (2007).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pp.1118–1132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 Moller, Sara Bjerg. (2022). "Domestic Politics, Threat Perceptions, and

-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he Case of South Korea, 1993–2020." *Asian Security* Vol. 18, No. 2, pp.119–137.
- Morrow, James D. (1989). "Capabilities, Uncertainty, and Resolve: A Limited Information Model of Crisis Bargain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No. 4, pp.941–972.
- Morrow, James D. (1992). "Signaling Difficulties with Linkage in Crisis Bargain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2, pp.153–172.
- Murdock, Clark. A., and Jessica. M. Yeats. (2009). *Exploring the Nuclear Posture Implications of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Murray, Shoon K., (2002). *Anchors against Change: American Public Opinion Leaders' Beliefs After the Cold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usgrave, Paul and Steven Ward. (2021). "Testing Tripwire Theory Using Survey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orking Paper*, pp.1–40.
- Narang, Neil, and Rupal N. Mehta. (2019). "The Unforeseen Consequences of Extended Deterrence: Moral Hazard in a Nuclear Client Sta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3, No. 1, pp.218–250.
- O'Neil, Andrew. (2011).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Redundant or Resurgent?."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6, pp.1439–1457.
- Quek, Kai. (2021). "Four Costly Signaling Mechanis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5, No. 2, pp.537–549.
- Reiter, Dan. (2014). "Security Commitments and Nuclear Proliferation."

-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0, pp.61–80.
- Russett, Bruce. (1990). "Doves, Hawks, and US Public Opin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5, No. 4, pp.515–538.
- Russett, Bruce, Thomas Hartley, and Shoon K. Murray. (1994). "The End of the Cold War, Attitude Change, and the Politics of Defense Spending."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Vol. 27, No. 1, pp.17–21.
- Schelling, Thomas C. (1980).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 Sechser, Todd S., and Matthew Fuhrmann. (2013).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7, No. 1, pp.173–195.
- Singh, Sonali, and Christopher R. Way. (2004).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pp.859–85.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pp.461–495.
- _____.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 Spence, A. Michael. (1978).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No. 3, pp.355–374.
- Sukin, Lauren. (2020).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6, pp.1011–1042.
- Thyne, Clayton L. (2006). "Cheap Signals with Costly Consequences: The Effect of Interstate Relations on Civil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0, No. 6, pp.937–961.

- Wallander, Celeste A. and Robert O. Keohane. (2002). "Risk, Threat, and Security Institutions." in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 Walt, Stephen M. (1997).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pp.156–179.
- _____. (1990).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ess).
- Yarhi-Milo, Keren, Joshua D. Kertzer, and Jonathan Renshon. (2018). "Tying Hands, Sinking Costs, and Leader Attrib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10, pp.2150–2179.

3. 인터넷 자료

- 연합뉴스, '국민 한미동맹 지지하지만 방위비 분담요구엔 부정적' (2019.12.26.)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91215010600071>
- 연합뉴스, "'아프간 사태, 한미동맹 강화·강군 유지 교훈 줘'" (2021.08.17.)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10817149500001>
- 한국일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 (2021.08.1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8171700053_58
- 한겨레, '바이든 "아프간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달라…공격당하면 대응할 것"' (2021.08.2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8429.html#csidx745e4dc9cc48653bd07803d8b081826
- 연합뉴스, "신년 공동사설'이란', (2011.01.01.)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10101048300014>

부 록

1. 처치집단 쿼터 구분에 대한 설계 과정

처치집단 구분 시 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사 시 점인 2022년 3월 인구정보를 기준으로 900명에 대해 성별/연령별 비례 할당한 뒤, 3으로 나누어 3집단 쿼터를 구성하였다.

[표 1] 성별/연령별 목표 쿼터]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4	69	72	69	86	81	89	87	125	148

[표 2] 집단별/성별/연령별 목표 쿼터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통제	24	23	24	23	29	27	30	29	41	50
처치1	25	23	24	23	28	27	30	29	42	49
처치2	25	23	24	23	29	27	29	29	42	49

3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임의대로 조절하여 집단 간 쿼터수를 맞추었으며, 실사 과정에서 응답 순으로 통제집단부터 쿼터를 채웠고, 통제 집단의 쿼터가 충족되었을 시, 처치1 설문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사 과정에서 동시에 응답하게 되어, 쿼터가 오버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각 집단별로 5명씩 넘어간 쿼터가 해당 응답자이다.

[표 3] 실제 조사된 쿼터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통제	24	23	24	23	31	27	31	30	42	50
처치1	25	24	25	24	30	27	30	29	41	50
처치2	25	24	24	23	31	26	31	29	42	50

[표 4] 기술통계 결과 - 주요 독립변수/통제변수

변수	(1)	(2)	(3)	(4)	(5)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성	915	0.498	0.500	0	1
연령	915	3.325	1.444	1	5
대북정책 (강경)	915	3.212	1.190	1	5
대북정책 (온건)	915	3.183	1.110	1	5
지역	915	1.976	1.347	1	6
종교	915	4.025	2.150	1	7
교육	915	3.491	1.007	1	5
소득	915	4.187	2.053	1	8
종사업	915	6.214	3.705	1	12
정치성향	915	3.043	0.897	1	5
위협인식 (상대적 국방력)	915	2.505	1.082	1	5
위협인식 (북한 핵보유)	915	3.683	1.059	1	5

[표 5] 쳐치의 무작위 할당 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1)	(2)	(3)
	통제 vs 쳐치1	통제 vs 쳐치2	쳐치1 vs 쳐치2
남성	0.0448 (0.167)	0.0326 (0.166)	-0.0248 (0.167)
연령	-0.0274 (0.0613)	0.0361 (0.0631)	-0.0579 (0.0613)
지역	0.0182 (0.0611)	0.00721 (0.0619)	0.0143 (0.0607)
종교	-0.0236 (0.0395)	0.0378 (0.0403)	-0.0572 (0.0399)
교육	-0.154* (0.0877)	-0.111 (0.0883)	-0.0400 (0.0874)
소득	-0.00335 (0.0426)	-0.0159 (0.0447)	0.0170 (0.0446)
종사업	-0.00462 (0.0237)	-0.0419* (0.0237)	0.0401* (0.0243)
정치성향	0.0688 (0.0935)	0.0695 (0.0910)	-0.0277 (0.0929)
상수	0.499 (0.563)	0.199 (0.573)	0.313 (0.573)
관측값	610	610	61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개방형 응답 질적코딩 결과

기술통계 결과는 가설 1-1에 대한 본 논문의 예측 방향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에 대한 응답자의 상대적 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적 텍스트분석과 질적 코딩을 함께 진행하였다. 질적 코딩 결과는 다자 손艋기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상대적 선호가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에 따른 것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표 6] 질적 코딩 결과 보고 –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신호	선택한 응답자
6자회담	302명
유엔안보리	166명
핵 사용 가능성 발언	148명
대북선언정책	135명
없음	47명
모름 / 무응답	80명

[표 7] 질적 코딩 결과 보고 –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 수단	선택한 응답자
방위조약	186명
주한미군 주둔	279명
연합군사훈련	156명
가치(인권, 민주주의) 중심 동맹 강화	105명
없음	34명
모름 / 무응답	80명

Abstract

What explains variation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among a protégé's general public? Existing literature posits that a protégé's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is mainly influenced by the policy decided upon by their patron. However, it is possible that perception may also b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and an individual's ability to interpret them.

This study uses new survey data to identify three factors that drive changes i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First, respondents generally trust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alliance commitment, and they trust—in the order of—the use of sunk-cost, multilateral, and bilateral tying-hand strategies for signaling. Second, there was no change in trust in alliance commitments even with variation in the level of potential adversary threats, and there was also no interaction or mediating effect. Third, political ideology and attitude towards North Korean polic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explaining variation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By estimating trust in alliance commitment at the individual level with survey data, this study helps to explore and identify factors that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in the protégé.

Key Words: Perception of Alliance Commitment, Reassurance, Signaling Type, Threat, Dispositional Factors, Survey Experiment, Microfoundations of Costly Signaling

Student Number: 2020-27965